

**왜 핵안보**



**정상회의를**

**반대해야**

지인이 장호종 외

**하는가?**

# 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는가

장호종 외 지음

2012  
다함께

## 왜 핵안보정상회의를 반대해야 하는가

지은이 장호중, 김하영, 차승일, 강동훈, 김어진  
엮은이 장호중  
펴낸곳 다함께

발행일 2012년 2월 22일

주소 110-612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1243

전화 02-2271-2395

팩스 02-2271-2396

alltogether@alltogether.or.kr

<http://www.alltogether.or.kr>

값 3,000원

잘못된 책은 바꿔 드립니다.

---

차례 CONTENTS

머릿말 ... 5

핵안보란 무엇인가? ... 7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반대한다 ... 22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다 ... 30

미국은 왜 이란을 압박하는가 ... 39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를 낳을 제국주의 전략 ... 48

핵없는 세상이 대안이다 ... 53



## 머릿말

이 소책자는 오는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열리는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 2010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제안으로 처음 열렸는데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회의에는 미국, 중국 등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가진 다섯 나라와 '비공식' 핵무기 보유국인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밖의 나라 등 47개국이 참가했다. 유엔UN, 유럽연합EU,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회의에 참가했는데 서울 회의에는 추가로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도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핵안보정상회의의 공식 의제가 '핵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핵물질의 불법 거래 방지', '핵물질, 원전 등 핵관련 시설들의 방호'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낯선 표현들은 이 회의가 진정으로 노리는 바가

무엇인지를 가리고 있다. 진보진영 내 많은 단체들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추구해온 핵무기 패권 정책에 비취 볼 때 이 회의가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본질과 이 회의가 이루고자 하는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이 소책자를 만든 목적이다.

이명박 정부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정상회의를 연다며 수백억 원을 홍보비로 책정하고 수만 명의 경찰을 동원해 계엄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이 회의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공동전선(연대체) 기구인 ‘핵안보정상회의 대항행동’은 3월 한달 동안 각종 강연회와 홍보, 항의 행동을 벌이고 3월 25일에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 것이다.

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이 소책자가 의미있는 기여를 하게 되길 바란다.

2012년 2월 22일

# 핵안보란 무엇인가?

장호종

‘핵안보’ Nuclear Security<sup>1</sup>는 1990년대 초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몰락한 뒤 만들어진 첩보 영화의 단골 소재였다.

정신병에 가까운 성격장애를 가진 테러리스트가 구 소련 해체 당시 유실된 핵무기를 입수해 무고한 시민을 위협하면 미국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식의 얘기들인데, 최근 개봉한 <미션 임파서블 4>도 이 진부한 소재에 엄청난 돈을 들여 컴퓨터 그래픽을 덧씌운 재탕일 뿐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핵 테러’는 미국을 비롯한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이 소련 몰락 이후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각종 정보 기관들을 운영하는 핑계가 되기도 했다.

---

1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핵안보를 “핵물질(핵무기용 핵물질, 방사성물질 포함)의 절도, 사보타지, 불법적 접근 이전 활용 등 불법적 행동에 대한 방지, 탐지, 대응행위”라고 말한다.

그럼에도 1990년대 내내 핵안보 정책은 미국의 대외 핵 정책에서 주변적인 구실을 할 뿐이었다.

미국 입장에서는 테러리스트보다는 핵무기를 이미 갖고 있거나 가지려는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1990년대 초에 미국의 핵안보 정책은 주로 구 소련 지역에 있던 핵무기를 해체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넌-루거 프로그램’<sup>2</sup>으로 불린 핵군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등 구 소련의 4개 지역에서 15년 동안 핵탄두 6천6백기를 파기하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대 4백70여 개를 폐쇄했다.<sup>3</sup>

미국은 1994년에 이 대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각각 1백20억 달러와 7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핵 폐기에 대한 경제적 보상 정책은 1994년 10월 제네바합의의 전례가 된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가 갖고 있던 핵무기가 줄어들었다고 인류의 안전이 나아진 측면은 조금도 없었다. 몇십 개의 핵

---

2 1991년 당시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었던 샘 넌Sam Nunn과 공화당 의원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가 주도해 만든 소련위협감축법안에 따라 시작된 프로그램이다.

3 전봉근, 《미국 핵안보정책 변천 연구》, 외교안보연구원, 2011.10

무기만으로도 인류의 절반 이상을 죽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미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만 해도 3만여 개에 이른다.

이 시기 미국의 ‘핵안보’ 정책은 사실상 생색내기 수준에 불과했고 미국은 1990년대 내내 핵무기확산금지조약<sup>NPT</sup>를 뼈대로 한 ‘핵비확산 체제’를 만드는데 훨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 핵비확산 체제와 NPT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미국은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한 유일한 나라이기도 하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은 곧바로 국제 핵무기 확산 방지 방안을 추진하지만 소련의 반대로 무산됐다.

1949년에 소련이 핵무기 개발에 성공하고 뒤이어 1952년 영국, 1960년 프랑스, 1964년 중국이 각각 핵 개발에 성공하고 더 많은 나라들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해졌다.

1968년 미국과 영국, 소련은 이 다섯 나라 외에 아무도 핵무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국제법을 만드는 데 합의했다.<sup>4</sup> NPT

---

4 NPT는 1968년에 체결돼 1970년에 발효됐다. 그러나 프랑스와 중국은 1992년이 돼서야 NPT에 가입한다.

체제가 시작된 것이다.

NPT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다.<sup>5</sup>

첫째, 핵 보유국들은 다른 나라에 핵무기와 핵무기 통제권, 기술을 넘겨주지 말아야 하고 비보유국들은 핵무기를 개발해선 안 된다.

둘째, 모든 나라는 ‘평화적 핵 이용 권리’를 가진다.

셋째, 핵 보유국들은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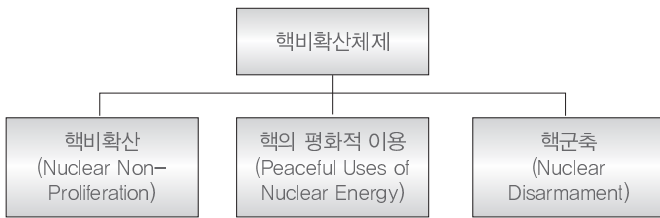


사진 1: NPT 체제의 개념

그러나 핵무기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보면 냉전이 끝날 때까지 NPT는 있으나마나한 협약이었다. 미국과 소련을 필두로 한 핵 보유국들의 핵무기는 줄어들기는커녕 크게 늘었다. 무기 개수 당

---

5 각각을 핵군축Disarmament, 핵비확산non-proliferation, 핵의 평화적 이용 권리 the right to peacefully use nuclear technology이라고 부르고, 이 세 가지 요소를 NPT로 대표되는 핵비확산체제의 “세 기둥”Three Pillars이라고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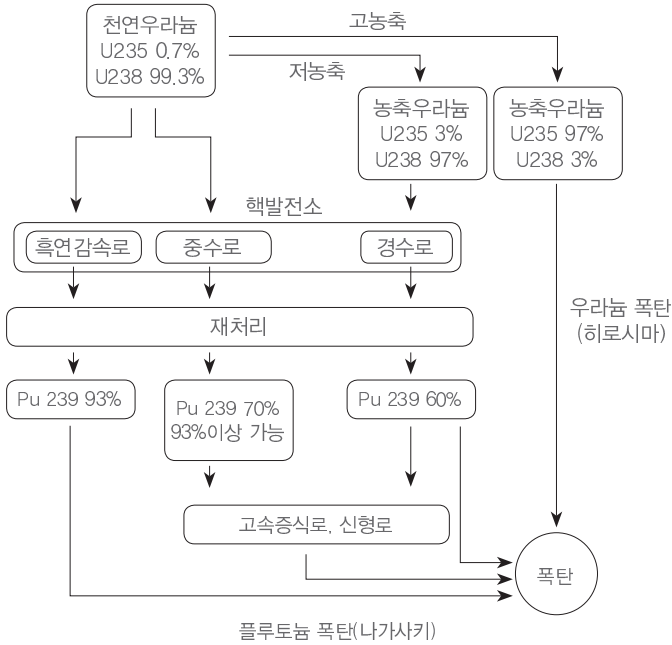


사진 2: 핵발전과 핵무기

대량 살상 능력도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양측 진영에 속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대가로 각각 미국과 소련에게서 핵 우산을(자국 내 핵무기 배치까지 포함해) 제공받았다.

NPT 체제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대 강대국이 동맹국들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이 됐을 뿐이다.

그럼에도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가 1974년에 첫 핵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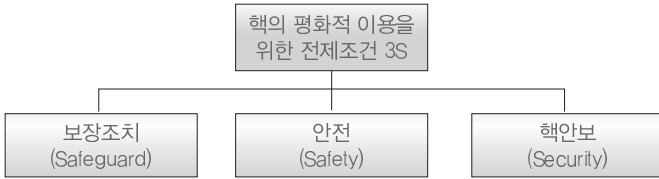


사진 3: IAEA의 주요 임무

을 성공해 새로운 핵 보유국이 됐다. 파키스탄이 그 뒤를 이었고 이스라엘도 미국의 지원 하에 1950년대 말부터 핵무기를 보유했다는 보고가 이어졌다.<sup>6</sup>

그러나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인도나 파키스탄도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다. 미국과 소련이 벌이는 지정학적 경쟁에서 이 나라들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자 미소 양국의 동맹자들 사이에서도 두려움과 조바심이 커져 갔다. 미국과 소련이 얼마나 실질적인 핵우산을 제공할지 하는 의심은 핵우산을 거둘 경우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 놓일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이어졌고 많은 나라들이 비밀리에 핵개발을 추진했다.<sup>7</sup>

6 모르데차이 바누누는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 의혹을 폭로했다가 반역죄로 18년 동안 복역했다. 1998년에는 시몬 페레스(이스라엘의 전 외무장관)가 요르단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다.

7 남한 정부도 박정희 정부 시절 핵무기를 개발하다가 적발된 바 있다.

NPT가 약속한 ‘평화적 핵 이용’과 군사적 핵 이용의 경계는 모호할 수밖에 없었다. 물리적으로 그 과정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핵발전소에서는 핵무기 원료가 생산되고 핵물질을 통제하기 위한 각종 실험은 핵무기 기술 개발에 기여한다.

민간 원자력발전소들은 대부분 핵무기에 부적절한 저농축 우라늄을 연료로 공급받는다. 그러나 그 발전소들도 연간 200킬로그램 이상의 플루토늄을 제조한다. 원자로급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미국은 1962년 그런 핵무기를 시험했고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IAEA[국제원자력기구] 임원인 모하마드 엘바라데이는 이런 상황을 몹시 우려하며, 광범위하게 분포된 이런 핵시설들이 ‘잠재된 폭탄 제조 공장들’이라고 지적한다.<sup>8</sup>

국제원자력기구<sup>IAEA</sup>의 핵심 임무는 바로 이 ‘잠재된 폭탄 제조 공장들’을 감시하는 것인데 IAEA의 존재 자체가 NPT 체제의 모순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IAEA는 NPT 체제의 모순을 관리하는 구실을 한다. 한편에서는 핵확산을 막고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적 핵 이용’을 돕는

---

8 헬렌 칼디코트 《원자력은 아니다》, 양문, 2007, p185.

것이다.<sup>9</sup> 이는 핵무기 보유국들에게는 비보유국들을 감시하는 수단이었지만 비보유국들에게는 비밀리에 핵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 NPT의 실패와 테러와의 전쟁

소련 붕괴 이후 중국과 프랑스가 핵보유국 자격으로 NPT에 가입하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지역 강국'들도 가입하는 등 미국의 핵비확산 정책은 겉으로는 크게 성공하는 듯 보였지만 비보유국들의 핵 보유에 대한 열망은 오히려 커졌다.

이 시기에 미국은 소련이라는 경쟁자가 사라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역 즉, 전 세계 석유 공급 기지인 중동과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잠재적 경쟁자들이 밀집해 있는 동아시아에 개입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

미국은 이를 위한 수단 중 하나로 NPT를 이용하려 했다. 특히 미국에게 핵무기를 개발하던 이라크와 북한은 싹을 잘라 버려야 할 '불량국가'이자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자신의 통제력

---

9 IAEA 등은 평화적 핵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전제조건으로 그동안 핵비확산 보장조치(Safeguard)와 핵안전(Safety)을 강조해 왔는데 최근 이 소책자의 주제인 핵안보(Security)도 필수 전제조건으로 부각하며 '3S'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을 각인시킬 주요한 수단이었다.

이라크는 이미 1970년대에 핵무기 개발을 시작했고 1980년대에 농축우라늄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미국은 1991년에 강제사찰을 벌이고는 곧바로 이라크를 침공해에 폭탄을 퍼부었다.

북한은 1956년 소련과 원자력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1962년 영변에 핵연구소를 세웠다. 1974년에는 IAEA에 가입해 부분적인 사찰도 받았다. 1985년에는 NPT에 가입했고 1986년 최초로 독자적으로 5메가와트 규모의 핵반응로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다. 1992년에는 IAEA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하고 사찰을 받아들였다.<sup>10</sup>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제출한 보고서와 사찰 결과가 다르다며 특별사찰을 받아들이라고 밀어부쳤다. 북한이 이에 반발해 NPT를 탈퇴했고 클린턴 정부는 전쟁도 불사할 기세였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일시적으로 위기가 봉합됐지만 미국은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며 중유 제공 등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 2002년 10월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의 우라늄 농축 의혹을 제기하며 합의를 파기했다. 결국 북한은 2003년 NPT를 탈퇴하고 2006년과 2009년 두 차례의 핵실험에 성공해 핵 보유국이 됐다.

---

10 전봉근, 앞의 글.

미국이 ‘불량국가’들을 상대로 강경대응을 할수록 NPT 체제의 불안정성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2001년 9·11 이후 부시 정부가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은 이런 불안정성을 극대화했다.

부시 정부는 9·11 테러의 배후로 아프가니스탄을 지목하며 전쟁을 벌이더니 이라크가 알카에다를 지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숨기고 있다며 침공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이라크 공격의 명분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후세인 정권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거나 은닉 하지도 않았고, 알카에다와 아무런 연계도 있지 않았다 … 이라크는 오히려 국제 테러활동 지대로 변모했고 … 미국은 이에 따른 여파로 북한과 이란의 핵 문제에 대처하는 데 제약을 받고 있다 … 다른 한편 미국과 적대적인 약소국들로 하여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급한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핵개발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로 작용했다.”<sup>11</sup>

이라크 전쟁 당시 반전 운동을 벌인 영국 의원 조지 갈러웨이도 미국의 이란 확전 계획을 비난하며 이런 상황을 비꼬았다.

“인도도 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인도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06년 3월 핵 개발과 관련해 미국의 협력을 보장받았다. 이 모든 사실들이 이란 정부에 보내는 신호는 분명하다 : 만약 우리가 조약 회원국이라는 이유로 이 모든

---

11 장노순, ‘핵테러와 미국 억지전략의 발전’, 《국가전략》, 2009년 제15권 3호

위협을 받고 있다면, 조약에서 탈퇴한 다음에 핵 개발을 지속하면 될 것 아닌가?”<sup>12</sup>

요컨대 NPT 체제의 실패는 이를 이용해 자신의 패권을 강화하려던 미국이 자초한 일이다.

NPT에 가입하지 않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NPT에 가입해 있던 이라크는 미군 공격으로 초토화됐고, NPT에 가입해 IAEA에 사찰까지 받아 온 이란도 미국의 공격 목표가 됐으니 말이다.

게다가 NPT에 가입해 있던 북한은 미국의 압박에 반발하며 탈퇴했고 핵실험까지 했지만 중동에 발이 묶인 미군은 북한에 으름장을 놓으면서도 실제로 군사 개입을 벌일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2000년대 내내 미국이 중동에서 벌인 전쟁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면서 미국의 대외 전략과 핵 정책은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2008년에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까지 겹치면서 미국의 지배자들은 엄청난 위기감에 휩싸였다.

2008년 말에 당선한 오바마의 임무는 이처럼 실추된 미국의 위신을 회복하고 다시 중동과 동아시아에 개입할 명분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2009년 4월 오바마의 프라하 연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

12 조지 갤러웨이, 《명분 없는 미국의 이란 공격》, 다함께, 2006

## 오바마와 ‘핵안보’의 재발견

오바마는 이 연설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구매, 제조 혹은 훔치기로 걱정했다”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핵안보정상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다. 또 핵무기뿐 아니라 핵물질의 밀거래를 막기 위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같은 임시 협력체계를 지속가능한 국제기구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오바마는 전임 부시 정부처럼 일방적이고 공격적인 대외정책을 펴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던 이들조차 오바마의 연설을 들으며 부시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 선언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졌듯이, ‘핵 테러’ 예방이 실제로는 핵물질을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 보였기 때문이다.

핵무기를 이용한 테러는 ... 사전에 방지되기 어렵고, 그렇다고 예방전쟁을 통한 위협 제거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성을 확보받기가 매우 힘들며 더욱이 이라크 공격의 실패로 미국의 지도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었다 ... 테러의 수단으로 핵무기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지만, 이를 활용한 위협 대상은

응징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테러 수단을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보복으로 전략이 바뀐 것이다.<sup>13</sup>

게다가 그 수단으로 언급된 PSI는 “북한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sup>14</sup>

PSI의 핵심 내용은 핵물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공해상에서 가로막고 검열을 하는 것이다.

미국은 2002년 아라비안 해역을 지나 예멘으로 이동하던 북한 선박 서산호가 핵 관련 물질을 싣고 있다며 스페인과 함께 공해상에서 이 선박을 검문한 바 있다. 이 배에서 스커드형 미사일과 연료 등이 발견됐는데 선박의 소유권이 예멘에 있고 국제법상 공해상에서 선박을 억류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풀어줘야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PSI를 추진했다. 그러나 많은 국제법 학자들은 이를 사실상 전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검문을 하는 나라와 그 대상이 되는 나라 사이의 협약이 아니라 마음 맞는 나라들끼리 아무나 붙잡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내 일부 NGO 활동가들은 핵 테러에 대한 국제적 대응을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으로 확대 해석해선 안 된다며 핵안보정

---

13 장노순, 앞의 글.

14 전성훈, 앞의 책.

상회의 반대 행동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는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이다.

부시 정부의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게이츠는 오바마가 당선하기 불과 일주일 전에 한 연설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다.

“국가로부터 테러리스트들에게 무기가 흘러들어갈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며, 9·11 이후 … 우리는 테러리스트와 이들을 지원하는 국가 사이에 아무런 차이를 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는 대량살상무기를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할 권리가 있다.”<sup>15</sup>

게이츠는 오바마 정부에서도 유임돼 계속 국방장관을 지냈다.

2010년 제1차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오바마는 핵태세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편의시설, 재정, 전문지식, 은신처 제공을 통해서 테러범들의 대량살상무기 사용 획득을 지원하거나 도와주는 국가, 테러집단, 기타 비국가 행위자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묻겠다” 하고 밝혔다.<sup>16</sup>

핵태세검토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뉴욕타임스〉와 한 단독 인터뷰에서도 오바마는 유독 이란과 북한을 NPT 체제의 “국외자”로 지목하고 핵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제1차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성명은 특히 고농축우라늄과 플루토늄에 중점을 두고 관련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

---

15 로버트 게이츠,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연설문, 2008. 10. 28

16 전성훈, 앞의 책.

데 이는 핵 ‘무기’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비확산 정책보다 한층 강화된 개념이다.

핵탄두를 만들거나, 그것을 실어나를 미사일을 갖고 있지 않아도, 심지어 핵 실험을 하지 않아도 핵무기의 원료를 가지고 있다면 문제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의에서 채택된 작업문서에서도 유엔안보리결의 1540호에 대한 지지와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지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결의안은 PSI에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미국이 2004년에 통과시킨 결의안이다. 비록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제재 수단까지 포함시키지는 못했지만 미국이 더 많은 나라들을 PSI에 끌어들이는 명분은 됐다.

요컨대 오바마가 새로운 핵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핵안보’는 결국 정당성을 잃은 NPT 체제를 보완해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명분일 뿐이다.

##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반대한다

장호종

3월 26~27일에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해 오바마의 제안으로 처음 열린 이 회의에는 “핵물질 보유량, 핵물질 방호 현황, 원전 건설 계획, 지역 배분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47개 핵무기·핵발전소 보유국이 참가한다.

이들이 겉으로 내세운 목표는 ‘핵테러 방지’다. 이를 위해 ‘핵물질 불법 거래를 막고 핵발전소 등 핵 관련 시설 방호 대책 마련 등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 테러 방지’는 핑계이다. 우선 이 회의는 북한, 이란 등 ‘비공식’ 핵 개발국들에 대한 강대국들의 제국주의적 압력을 정당화하는 구실을 한다.

특히 한반도 남쪽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가 진정으로 겨냥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한국 정부 당국자들도 애써 숨기지 않는다.

외교통상부 장관 김성환은 북핵 문제가 공식 의제는 아니라

면서도 “핵안보정상회의가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전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해 11~12월에 열린 여러 차례의 사전 세미나에서도 북핵 문제가 중요 이슈로 다뤄졌다. 지난 11월 24일 프랑스에서 열린 핵안보정상회의 전문가 회의에서도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관련 메시지가 북한 등에 전달 되도록 적절히 다루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연합뉴스》)

지난해 열린 워싱턴 제1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작업 문서’를 보면 핵테러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수단으로서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호의 “전면적인 이행”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결의안 1540호는 2004년 미국 부시 정부가 만든 대량살상 무기확산방지구상<sup>PS</sup>에 국제법적 지위를 부여하려고 통과시킨 결의안이다.

PSI의 핵심 내용은 핵물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배의 이동을 공해상에서 가로막고 검열을 하는 것인데, 대다수 국제법 학자들은 이를 사실상 전쟁 행위로 해석하고 있다. 북한도 2009년에 이명박 정부의 PSI 참여를 비난하며 해상에서 자국 배를 공격하면 ‘전쟁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선포했다.

결국 핵안보정상회의는 핵안보는커녕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구실을 할 것이다.

이 회의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핵발전소를 개발·보유하고 있는 열강들이 모여서 북한·이란 등을 압박하며 '안전'을 떠드는 위선적이기 짝이 없는 회의인 것이다.

최근, 미국의 대이란 제재 강화와 이에 대한 이란의 반발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커지는 상황에서 핵안보정상회의는 그것을 더욱 부추기는 구실을 할 것이다. 핵안보정상회의를 몇 주 앞둔 2월 말~3월에는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키리졸브 훈련, 쌍용 훈련 등)도 예정돼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핵무기·핵발전 강대국들이 주도하는 이 죽음과 재앙의 회의를 반대한다는 관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 핵안보와 핵무기

그런데 핵안보정상회의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진보진영 내에서도 논쟁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의 대응을 위해 여러 차례 열린 회의에서 일부 NGO 활동가들은 '핵안보'가 북한이나 이란 같은 핵 개발 '국가'가 아니라 테러리스트를 겨냥한 회의라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전쟁을 많이 일으킨 미국이 중동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호를 이용했듯이,

‘핵 테러 방지’는 세계 최대 핵무기 보유국인 미국이 북한이나 이란에 대한 제국주의적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만든 슬로건일 뿐이다.

국내외에서 발간된 대부분의 연구서들에서도 “50여 개국 정상 모두가 한반도에서 비확산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노골적으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공동 성명은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핵확산 활동을 비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주문한다.<sup>17</sup>

## 핵안보와 핵발전소

일부 환경 활동가들은 회의의 공식 의제가 주로 핵발전 문제이므로 진보진영의 대응도 주로 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기회를 이용해 핵발전소 반대(‘탈핵’)를 선전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단체는 핵발전 문제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부문주의도 작용하는 듯하다.

그러나 ‘핵안보’와 ‘핵안전’은 명백히 다른 개념이다. 전자는 테러나 사보타지 등 의도적인 핵 시설 공격이나 핵물질을 이용한 테러를 막는 것을 뜻한다. 후자는 주로 핵 시설 자체의 결

---

17 전성훈,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와 북한 핵문제》, 통일연구원, 2011.11

함이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지난해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 사고 때문에 눈치를 보느라 핵발전소 안전 문제를 의제로 올려놓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이 회의의 진정한 목적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또 핵발전을 반대하기 위해서라도 단지 선전이 아니라 핵발전을 부추기는 강대국들의 모임과 논의를 막아야 한다. 핵발전은 현상 유지를 하면서 ‘안전’하게 관리할 문제가 아니다. 핵발전을 폐쇄할 때 진정한 안전이 가능하다. 후쿠시마 핵 재앙이 그것을 보여 줬다.

또 핵발전과 핵무기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따라서 핵무기·핵발전을 통해 세계를 재앙으로 몰아가는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패권 추구에 대한 분명한 반대가 중요하다.

‘핵발전에 초점을 맞춰서 탈핵을 선전하자’ 하는 활동가들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 ‘탈핵’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도 아니다. 반핵이나 탈핵 같은 구호가 실현 가능하지 않고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거나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노후 핵발전소 폐쇄,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같은 부분적 요구만 내세워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처럼 정부와의 대립을 회피하는 수세적인 태도가 핵안보정상회의의 ‘반대’에 대한 부정적 태도로 나타나는 더 근본적인 이유인 듯하다.

## 북핵

핵무기 문제에서도 누구의 핵이 진정한 문제인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 진보진영 내에서도 미국 제국주의와 북핵 문제에 대한 관점은 단체마다 상당히 다르다.

예컨대 일부 진보 단체들은 북한의 핵보유와 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에 대해 양비론적 태도를 취해 왔다. 반면 일부 진보진영은 북한의 핵보유를 불가피한 '자위적' 수단으로 옹호한다.

그러나 우선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양비론적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야말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친미국가들의 핵 무장을 용인해 온 주범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압박이 낳은 '괴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미국이 북한에 대한 '핵선제공격론'까지 들먹이자, 북한은 핵 무장을 통해 안전을 도모하려 한 것이다. 따라서 미국 등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핵 무기에 우선해서 반대해야 하고, 이란·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위선적·패권적 압박에 동조해선 안 된다.

그렇다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핵 보유는 진정한 반제국주의 투쟁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 핵무기는 미국의 전쟁광들이 아니라 평범한 노동자·민중

의 목숨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진보진영은 미국의 위선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압력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맞서 싸우면서 모든 핵에 반대하는 견지에 서야 한다.

## 후쿠시마 핵 사고 이후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3월은 후쿠시마 핵 사고 1년이 되는 달이다. 따라서 한 달 내내 이와 관련해 각종 행사와 집회 등이 열릴 것이다.

사실 이는 오바마와 이명박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일 것이다. 만약 핵안보정상회의 일정이 2년 전에 정해진 것이 아니라면 3월만은 꼭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사이에 이토록 엄청난 사고가 벌어질 줄 누가 알았겠는가.

후쿠시마 핵 사고는 혹시 있을지도 모를 핵 테러가 아니라 그토록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선전해 온 핵발전소 즉, '평화적 핵 이용'이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 줬기 때문이다.

엄청난 비극을 딛고 일어난 반핵운동 진영에 큰 기회가 열린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탈핵이라는 과제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지배자들도 어떻게든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핵안보정상회의에 1주일 앞서 서울에서 열리는 핵산업계 회의에는 핵관련 국제기구 담당자들과 핵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가한다.

핵산업계 회의 조직위원장을 맡은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김종신은 이 회의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떨어진 원자력에 대한 신뢰 회복”과 “원자력 산업의 입지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일본 핵 재앙을 보고도 이 ‘죽음의 발전’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세계 각국에 핵발전을 수출하는 데에도 이용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는 G20 회의 당시처럼 이 회의를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엄청난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또 당시처럼 계엄령 수준의 경호 대책을 내놓을 듯하다. 총선을 앞두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도 할 것이다.

따라서 핵안보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대중 행동을 건설해야 한다.

#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전략이 한반도를 불안정에 빠뜨리다

김하영

2009년 1월 오바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남북 화해와 협력을 바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오바마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낙담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대화보다 북한의 선先 굴복을 요구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전략’은 북한 체제가 변하거나 붕괴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것이다. 지원이나 보상은 그 다음이다.

물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 제재와 압박을 가해 변

---

\* 이 글은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긴장이 높아졌던 지난 2011년 1월 〈레프트 21〉 49호에 실린 기사다.

필자 김하영은 다함께 운영위원, 《국제주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저자, 계간 《마르크스21》 편집자이다.

화나 붕괴를 일으키려 한다.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천영우는 최근 미국 공영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도록 만들지 못한 것은 제재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는 끔찍한(제재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을 생각하면) 말을 했다.

오바마가 이런 이명박 정부를 따돌려 '외교 고아'로 만들고 한반도 주변 정세를 훈훈하게 만들 것이라는 기대는 지난 2년 동안 산산조각이 났다. 오히려 지금 오바마와 이명박은 '찰떡동맹'이라고 불린다.

누구와도 대화하겠다던 오바마 정부는 북한과 대화는 하지 않고 독자 제재부터 유엔을 동원하는 제재까지 제재 리스트만 늘려 왔다. 북한에 대한 선제 핵공격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 뒀다.

그러나 그 결과는 부시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실제로 오바마 집권 이후 북한은 핵 능력을 향상시켰다. 2009년 하반기에 미국이 “대화와 제재 투 트랙”을 말하자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앞세우고 대화를 하겠다면 우리 역시 핵 억제력 강화를 앞세우고 대화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 결과는 지난해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를 통한 대화 제의로 나타났다.

## 부시의 전철

오바마 정부는 왜 부시의 전철을 밟고 있는가? 그는 그 혼한 공화당 핑계도 댈 수 없는 상황이다. 2010년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선순위인데, 오바마 정부는 국내 경제 회복과 중동 정책은 물론 동아시아에서 기존 동맹 강화하기를 북한 문제 해결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기서 좀더 면밀히 살펴볼 것은 세 번째 문제다. 동아시아에서 기존 동맹 강화하기는 소위 북한의 '위협'과 서로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2010년 한 해 동안 오바마는 '북한 위협'을 이용해 동맹 강화라는 뚜렷한 성과를 남겼다. 천안함 사건이 대표적 사례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오바마가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제재와 압박을 강화한 것이 이명박 정부에 '끌려다닌' 결과라고 주장한다. 부시의 일방주의를 되풀이하지 않고 동맹의 입장을 중시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천안함 사건 직후, 이명박 정부가 미국을 '끌어들여' 이 문제를 '국제화했다'는 주장이 유행했던 것은 이런 관점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러나 이 주장은 동아시아에 걸린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해

관계를 깨닫지 못하는 소치다. 미국의 이익과 상충한다면 오바마 정부는 결코 이명박 정부와 북한 제재·압박 공조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오바마 정부가 자국 이익을 위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 정부의 후텐마 기지 이전 입장을 반대하고 좌절시킨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 오바마의 대북정책 — 북한의 ‘위협’을 이용하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오바마는 북한의 위협을 해소하려 하기보다 이용하려 하는 것일까? 이를 이해하려면 세계적 판도에서 일어나는 제국주의 질서의 장기적 변동과 그에 대처하는 미국의 전략을 알아야 한다.

세계 질서 변동은 세계 경제력 분포의 변화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은 세계 산업생산의 50퍼센트를 차지했지만, 1980년대 25퍼센트로 하락했고, 2008년 경제 공황으로 미국 헤게모니는 더욱 금이 갔다.

반면 지난 20년 새 중국이 부상했다. 중국의 GDP는 1978년 이후 연평균 9.5퍼센트씩 성장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경제 규모에서 중국은 2005년에 영국을 제쳤고, 그 뒤 독일을 따라잡았고, 2010년 2/4분기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아시아 나라들의 대중국 무역이 급속히 늘었고, 2008년 경제 공황에서 회복되는 데서도 중국의 구실이 결정적이었다.

## 균형 외교

남한의 경우만 봐도, 2002년까지 남한의 제1위 수출국은 미국이었으나 2003년부터 중국으로 바뀌었고, 2006년까지 남한의 제1위 수입국은 일본이었으나 2007년부터는 중국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는 한·중·일 경제통합이 한국 경제에 이롭다는 자료를 냈다.

이처럼 세계 경제력의 분포가 변하고 중국이 강국으로 떠오르자 국가 간 질서에도 조금씩 조심스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지배계급의 일부는 한미동맹 일변도 외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동원·정세현·이종석 등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인사들이 주축이 된 한반도평화포럼은 올해 신년사를 통해 “균형 외교”를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미국과 일본의 교역 규모를 합친 것보다 더 큰 시대”라는 점을 강조했다.

비록 천안함과 함께 몇 달 만에 침몰하긴 했지만 아시아 중

시를 내세웠던 일본 민주당 정부의 전 총리 히토야마는 또 다른 사례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동맹인 일본과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져 그렇지 않아도 흔들리는 미국의 동아시아 패권이 약화될까 봐 매우 우려한다.

미국이 걱정하는 것은 단지 일본·한국과의 양자 관계가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전체다. 예를 들어, 중국이 자원 운송로나 교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기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아시아 해안을 주름잡아 온 미국의 지정학적 영향력과 충돌을 빚을 수도 있다.

##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

미국은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 전략을 구사하려 한다. 오바마가 선거 유세 기간에 끼고 다녀 화제가 된 책 《흔들리는 세계의 축》The Post American World에는 이런 조언이 나온다.

“지역 국가들은 자기들 틈바구니에서 헤게모니 국가가 등장할까 봐 걱정”하는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미국은 이들에게 편리한 동맹”이다. “지역적 패권의 등장은 미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강화해 준다.”

요컨대 지역 강국의 등장을 미국의 영향력 강화의 기회로 역이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정부가 다오위다오/셴카쿠 열도 사건에서 취한 태도를 보면 이 전략의 순수한 적용 사례를 볼 수 있다. 미국은 중국이 이 사건에 강경 입장으로 나온 것을 부각시키며 주변국들의 우려를 부추겼다. 그리고는 이 문제가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 대상”이라며 일본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다.

일본은 그 석 달 뒤에 발표한 ‘신방위대강’에서 중국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우려사항”이라고 명시했다. 아시아 중심주의를 내세웠던 일본 민주당이 이렇게 입장을 변경한 것은 다오위다오/셴카쿠 열도 사건과 미국의 전략이 미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은 또 다른 사례다.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은 북한을 비난했고, 대북 압박에 동조하라고 중국에 요구했다. 중국이 이를 거절하자(중국은 북한이 불안정에 빠져 난민 쇄도 따위의 형태로 그 여파가 중국에 미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제 북한을 두둔하고 나서겠다는 것이냐?’며 남한을 적극 옹호했다. 그 뒤 한미 양국은 전략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의 MD미사일방어체제 가담 수순을 밟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베트남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서도 베트남 편을 들며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베트남과 군사 및 핵 협력

을 강화하려 한다. 지난해 7월 동해에서 훈련을 마친 조지워싱턴호의 다음 목적지는 베트남이었다. 심지어 미국은 베트남에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 정부의 핵 위선을 잘 보여 준다.

## 신냉전?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은 지난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에 개입하고,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군과 자위대가 역내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이 성과들은 2010년 2월에 발표된 미국 4개년 국방검토보고서<sup>QDR</sup>의 '중국 해양방어선 확대 저지 방침'과도 맞아떨어진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 '봉쇄정책'을 포기하고 '전략적 파트너십'을 추구하겠다는 약속과는 정반대 길을 걸어 왔다. 특히 경제위기 대처 과정에서 중국과 갈등을 빚었고, 한반도 불안정을 이용한 기존 동맹 강화로 중국의 부상에 맞섰다.

이런 갈등이 부각되자 일각에서는 '신냉전' 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의 부상에 대한 지나친 단순화이자 과장이다. 냉전 체제란 국가 간 경쟁이 양대 초강대국 블록이라는 양극적 틀 속에 우겨넣어져 양국의 동맹국 지배자들이 그 질서에 복종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는 질서를 뜻한다.

그렇다면 세계적 차원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차원에서도 신냉전은 도래하지 않았다. 남한 지배자들만 봐도 한·미·일 동맹만을 가능한 선택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부상하는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자들 사이에서도 만만치 않다.

신냉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세계가 평화롭고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열강들의 이해 각축으로 세계는 더욱 유동적이고 불안정하다. 특히,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정책 때문에 적어도 10~20년 동안 동아시아 정세는 불안정에 휩싸일 것이고 이와 함께 한반도 상황도 요동칠 것이다.

# 미국은 왜 이란을 압박하는가

차승일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직접적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미국이 대이란 압박을 강화할 좋은 구실이 됐다. IAEA는 기존 입장과 달리 이란이 핵무기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이란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 강화가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 지배를 공고히 해서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바로 이 이유에서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미국은 창피를 당하며 이라크에서 쫓겨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

\* 이 글은 미국의 대 이란 압박으로 긴장이 고조되던 2012년 1월 상황을 배경으로 쓴 글로 <레프트21> 74호에 실렸다.

역설적으로 이란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그래서 미국은 2006년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스라엘과 공조해 레바논을 폭격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거듭 이란을 압박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되레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도왔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갖은 핑계를 들어 이란을 괴롭히는 근원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란이 굴복하기 전에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테고, 군사적 공격 기회도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물론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당장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당한 굴욕 때문에도 주저할 수 있다. 게다가 심각한 경제 위기도 새로운 전쟁물이에 제동을 거는 한 요인일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협화음”을 내는 듯 보일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은 당장 침공하려고 안달이 났는데 미국은 미적지근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너무 크게 봐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신년 국정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경제적 영향력 실추를 압도적 군사력으로 벌충하는 전략에는 모두 동의한다. 예컨대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은 비판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파키스탄으로 확장했다.

미국은 적절한 계기가 생기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능히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미 유엔 제재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는 것은 이란을 2003년의 이라크처럼 약화시킬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이란 압박 강화는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아랍 혁명으로 미국 대중동 전략의 한 축인 이집트가 크게 흔들렸다.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축인 이스라엘의 처지도 위태로워졌다.

미국은 리비아 혁명에 개입하면서 아랍 혁명 전체에 개입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아랍 민중을 통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아랍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되찾으려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걸림돌 구실을 하는 이란을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지배자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을 견제하려 해도 중동 석유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에게는 단순히 미국을 돕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독자적 이해관계를 구축해 보려는 계산이 있는 듯하다. 미국 패권의 약화 속에서 제국주의 간 주도권 다툼이 불안정을 더 부추기는 것이다.

지금의 험악한 분위기는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1월 29일~2월 1일) 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듯하다.

우선 IAEA 사찰단이 11월 보고서의 내용을 근본에서 뒤집는 입장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 아마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술 수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만큼은 아니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곧 도달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이 될 듯하다.

그러나 설사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미국의 이란 압박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서방 열강들이 수십 년간 이란을 압박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서방의 이란 압박을 먼저 반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도 반대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일부 NGO의 주장에는 약점이 있다. 일부

NGO는 미국의 이중 잣대를 옹계 비판하고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도 분명히 반대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대응은 IAEA 사찰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자승자박의 논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압박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이란 민중과 전 세계의 민중이 지고 있다.

최근 이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했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란의 체감 물가가 거의 40퍼센트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민중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전쟁으로까지 치달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이란 압박으로 세계가 한층 불안정해지고 이란과 전 세계 민중이 겪을 고통이 더 커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멈추기 전에는 이 쟁점이 거듭거듭 불거지리라는 점도 분명하다.

## 한국 정부는 이란 제재 동참 말라

1월 16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은 한국을 방문해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

며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모두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의 압박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 아인혼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여태껏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워 왔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미관계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해 있던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2000년에는 북한을 “깡패국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2003년에 NPT를 최종 탈퇴했고 2005년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풀려면 아인혼의 말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한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일부 감축하면서 국방수권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 받는 식으로 이란 제재에 동참할 듯하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석유 우선 공급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값싼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줄이는 데서 오는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이란은 한국의 중동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아무리 국방수권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 받는다고 해도 대이란 무역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로 이런 ‘경제적’ 이유를 들어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허점이 있다. ‘경제적’으로만 판단하더라도 한국 경제에는 대이란 무역보다 대미 무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맞서기 힘들다.

한국 지배계급은 최강대국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이는 호기호위(狐假虎威) 전략을 취해 왔다. 그래서 한국 지배계급은 경제적으로 약간 손실을 입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런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노동계급과 민중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 미국이 벌인 전쟁몰이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신이 상승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을지는 몰라도, 한국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등 한국 민중의 생활 조건은 나빠졌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 때문에 힘든 처지에 미국의 이란 압박으

로 석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은 물가 상승으로 한국 노동계급과 민중이 겪을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또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전 세계 민중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 다용도 악법인 국방수권법

지난해 12월 통과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보통 ‘이란제재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계속 교역을 하고 싶다면 이란과 거래를 끊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수권법은 미국 제국주의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지독한 법안이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은 이란 경제 제재만을 목표로 한 법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은 “반테러”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미국 시민을 무기한 감금하거나 고문할 수 있다.

“테러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규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미국 내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점거하라’ 운동 등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

##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를 낳을 제국주의 전략

김어진·강동훈

미국 오바마 정부는 주요 전쟁 들을 동시에 치르는 전략을 포기하고, 육군을 현재의 57만 명에서 49만 명으로 줄인다는 새로운 국방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엄청나게 늘어난 재정적자 때문에 향후 10년간 국방비 4천5백억~1조 달러를 삭감해야만 하는 처지를 반영한 것일 것이다.

미국이 전 세계적 패권을 지키려면 중국의 부상을 견제해야 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 그래서 오바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해군과 공군에 대한 투자는 확대한다고 밝혔다.

---

\* 이 글은 2012년 1월 14일에 발행된 <레포트21> 73호에 실린 글이다.

이 때문에 미국 국방의 중심축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했다는 피상적인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에서 중동과 석유의 중요성은 결코 쉽게 사라질 수 없다. 경제적 힘은 약해지는데 중동에서 패권을 유지하고 동아시아에서 중국의 부상도 견제해야 한다는 필요 때문에 미국이 난처한 처지와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고 봐야 한다.

미국은 지난 10여 년간 4조 달러나 퍼부은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사실상 패배했다. 그래서 연초부터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패배를 수습하고 중동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시’를 말하면서도 이란 압박을 강화하면서 중동에 힘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 중동 패권을 강화하려 한 주요 목표 중 하나도 중동 석유에 크게 의존하는 유럽과 아시아 국가를 통제해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미국이 1990년대 이후 아·태 지역 중시 입장을 여러 차례 천명해 놓고 실제로는 중동 지역에 지상군을 대규모 투입하는 상황이 되풀이돼 온 만큼 앞으로 똑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되면 중동에 발이 묶인 미군의 우선순위에서 한반도와 아·태 지역이 밀려날 수 있다” (<조선일보> 1월 7일치)는 분석이 더 현실적이다.

이 때문에 한국의 보수 우파들은 “말로만 안심하라고 해서 는 소용이 없”고 “한반도 안보 전선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한국 국민에게 확실하게 인식시켜야 할 것”(《중앙일보》 1월 8일 치)이라고 호들갑을 떠는 것이다.

물론 미국은 동아시아 동맹국들을 안심시키고 확실히 묶어둠으로써 중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막으려 한다. 이 때문에 중국의 〈환구시보〉는 “미국의 새 군사전략의 핵심은 미국의 남중국해 진입을 막아 온 중국의 노력을 좌절시키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 방위비 분담

이를 감안하면 미국의 새 국방전략이 이 나라에 미칠 영향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미국은 중국을 포위·봉쇄하기 위한 군사전략에 남한을 더 많이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평택 미군기지가 한미동맹 차원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또한, 동맹국 협정에 따라 미군 함정과 미군 병력이 제주해군기지에 접근하게 될 것이고, 제주해군기지는 미국의 전투 시나리오의 중요한 정거장이 될 것이다. 평택이나 신설될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해양 전략에 따라 이지스 탄도미사일 방어 함

정, 핵잠수함, 핵항공모함의 기항지로 활용되고 대중국 봉쇄정책에 이용될 수 있다.

둘째, 미국은 군사 비용 부담을 나누자는 요구를 강화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일본·한국·호주에 더 많은 방위비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2009년에 체결됐고 2013년까지 유효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한미협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만이 아니라 국방비 자체를 늘리라는 요구를 강화할 것이다. 《디펜스 21》 김종대 편집장은 지난해 10월에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미국이 국방비를 70~80퍼센트 올릴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 GDP 대비 국방비가 2.6퍼센트인데 이것을 4퍼센트까지 올리라는 것이 당시 미국의 요구”였다는 것이다.

실제 1992년 8조 4천억 원, 2002년 16조 2천억 원이던 한국의 국방비는 올해에는 33조 원에 달해 10년마다 갑절이 됐다.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빠른 증가율이다.

미국의 무기 수입 요구도 늘고 있다. 미국은 국방예산이 줄어들어 미 국방부 수주계약이 감소해 방위산업체들이 입을 타격을 완화해 줄 무기수출을 장려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미국의 이런 요구에 응해, 정권 말인데도 14조 원을 들여 미국 무기 구매를 시작했다.

셋째, 주한미군은 전략적 유연성에 따라 해외 파견과 해외 군사 작전에 더 많이 참가하게 될 것이다. 전략적 유연성은 해외 각 지역에 있는 미군의 역할과 작전범위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해 미군을 신속기동군 체계로 전환해 부대와 기지를 통합하고 재배치하는 것이다.

이것은 남한이 세계적 분쟁 개입을 위한 미국의 기지가 돼 한반도가 더 큰 군사적 불안정에 휩싸일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은 전 세계에서뿐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제국주의 패권을 위해 불안정과 긴장을 고조시키며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큰 고통을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핵발전의 재앙을 유지·확대하려는 회의  
핵없는 세상이 대안이다

장호종

지난해 3월에 일어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보여 준 것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었다.

후쿠시마 사고처럼 예측할 수 없는 자연 재해는 언제든 핵발전소의 냉각 장치를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고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지금도 수습되지 못한 채 방사성 물질을 쏟아내고 있는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발전소를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돈을 들이붓는 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줬다.

드리마일과 체르노빌 사고, 한국 핵발전소의 잦은 고장과 사고들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테러가 아니라 핵발전소 그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

\* 이 글은 <레프트21> 55(2011년 4월 23일호)에 실린 것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핵 발전소를 폐기해야 한다. 핵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그 비용을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 직전에 핵산업계회의원자력인더스트리서밋을 열어 핵발전소 수출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이토록 위험한 핵발전소를 추가로 짓고 있다.

이것은 핵안보정상회의가 핵발전을 유지·강화하려는 자본가·정치인들의 회의이기도 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들은 후쿠시마의 재앙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로 공기와 물을 통해 흘러나간 방사성 물질의 양은 상상을 초월한다. 역사상 최악의 핵발전소 사고로 알려진 체르노빌 사고보다 더 심각하다. 방사성 물질이 지금도 흘러나오고 있다.

핵연료가 녹아내려 바닥을 뚫고 떨어졌고 지금도 그 내부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 가장 낙관적으로 예측하고 있는 일본 정부조차 이 사고를 처리하는 데에 4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수십 킬로미터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방사성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것이라는 얘기다.

우리는 앞으로 최소한 수십 년 동안 이 끔찍한 사고의 결과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고 때문에 백혈병이나 갑상선암, 유방암 같은 악성 질병에 걸릴 것이다. 심장병이나 뇌졸중으로 죽는 사람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체르노빌 사고가 일어나고 한 세대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을 바라보고 있다.

핵발전 옹호론자들은 이 엄청난 사고를 두고도 ‘안전’ 타령을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사고 직후 ‘편서풍’ 타령을 하며 방사능 물질이 한반도로 날아올 수 없다고 했지만 20일 만에 한반도 남부 지방에 방사능 비가 내렸다.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된 사실이 분명해진 뒤에도 ‘위낙 적은 양이라 건강에 아무 문제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이라며 “유언비어나 비공식 정보보다는 정부의 발표와 대책에 귀를 기울이고 신뢰를 보내”라고 거들었다.

과연 적은 양의 방사선은 건강에 아무 영향이 없을까?

## 히로시마, 나가사키

방사선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핵폭탄을 떨어뜨린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살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2006년에 “방사선량과 암 발생률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아주 적은 양의 방사선에 노출되도 암 발생률이 그에 비례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주영수 한림대 의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이 없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1mSv밀리시버트라는 기준은 안전 기준이라기보다는 보통 사람이 1년 동안 생활하면서 피할 수 없는 방사선량이라고 봐야 합니다.

“계다가 그 정도 양으로도 1만 명당 1명에게 치명적 암을 발생시킵니다. 한국 인구를 놓고 볼 때 4천 명이 넘는 거구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암 환자의 상당수는 자연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가로 방사선에 노출되면 그만큼 암 발생률이 늘어나는 겁니다.”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이 정한 기준치는 의학적 ‘안전’하고는 별 관계가 없다. 이 기준치는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등 대규모 핵사고가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가 방사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해둔 것일 뿐이다.

이런 것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소한 그 기준은 넘지 말라고 정해둔 것이다. 그래서 이 기준들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졌고 나라들 사이에도 차이가 있다.

예컨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을 적용하면 후쿠시마 사고가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한국에 내린 비도 결코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일본은 사고 뒤 아예 기준치를 대폭 올려버렸다. 원래 기준치대로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주시켜야 할 판이기 때문이었다.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는 핵발전의 위험을 가장 비극적으로 입증한 사건이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보다 4백 배나 많은 방사능 물질을 쏟아냈다. 이 사고로 “최소한 50만 명이 죽었고 2백만 명이 피해를 입었다.”(니콜라이 아멜라네츠, 우크라이나 국립 방사선 방호 위원회 부위원장)

영국 스코틀랜드에 있는 핵 재처리공장 인근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이 가동되기 전 같은 연령대 아이들보다 백혈병 발병률이 높아졌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도 거의 같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1957년 영국 북서부의 윈즈케일 핵발전소에서 난 사고 때문에 이 지역에서 다운증후군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졌다. 여러 연구자들이 이 사고와 다운증후군 증가 사이에 “높은 상관 관계가 있다”고 발표했다.

방사선이 어느 정도까지는 인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심지어 몸에 좋다거나 하는 연구들은 대부분 여러가지 통계적 오류(너무 적은 대상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만 조사하기 등)를 안고 있다. 또 그것들 중 일부는 정부와 핵 로비스트들의 지원으로 이뤄진 연구들이었다.

백번 양보해 암에 걸릴 확률이 '낮다'고 해도 왜 우리가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할까?

많은 이들이 대안이 없지 않냐고 묻는다. 그동안 정부가 핵 발전을 멈추면 온실가스를 내뿜는 화력 발전을 더 해야 하거나 전기요금을 많이 올려 생활 수준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다. 한국에는 석유 한 방울 안 나온다는 얘기도 종종 듣는다.

그러나 대안은 있다. 그것도 지금 당장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대안 말이다.

## 핵 발전 - 대안은 있다

핵발전소를 완전히 없애려면 먼저 낭비되는 전력을 줄여야 한다. 보통 사람들이 전기를 아껴쓰거나 내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

핵심은 산업계의 전력 사용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엄격하게 실시되지만 산업용 전기요금은 사실상 역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기를 더 많이 쓸수록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것이다.

“가정용 전력이 전체 전력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5퍼센트로 10년 동안 0.9퍼센트포인트 상승했지만 제조업의 전력 사용 비중은 52.5퍼센트로 같은 기간에 5퍼센트포인트나 높아졌다. 따라서 동절기 전력 피크의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에 있는데도 애꿎은 국민을 문제의 원인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이 2010년 8월 3일 지식경제부에 제출한 ‘전력 산업구조 정책방향 연구’를 보면 2008년 기준으로 한국의 제조업 부문 부가가치 대비 전력사용량은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갑절이나 된다. 따라서 이를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만 낮춰도 전체 전력 소비량의 4분의 1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은 가능하다. 1970년대 오일 쇼크를 맞은 미국 정부는 강력한 자동차 연비 규제 조치를 발표했다. 그리고 10년도 안돼 연비가 갑절 넘게 높아졌다.

주택과 빌딩의 단열 기준을 대폭 높이고 건설사들을 규제하면 불필요한 냉난방용 전기 사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수많은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단열이 거의 안되는 집에서 온기를 유지하려고 불량 전열기구를 사용하고 있다. 정부가 나서

서 이들이 사는 집에 단열 공사를 해 주면 전력 소비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일을 전국적으로 실행하면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

## 녹색 일자리

핵발전소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력발전소도 대폭 줄여야 한다. 그러려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

예컨대 앞으로 10년 동안 전체 전력 생산의 4분의 3을 풍력으로 전환하려면 연간 24조 원이 필요하다. 엄청나게 많은 돈이지만 이런 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은 '저탄소 녹색성장' 계획을 발표하며 여기에 해마다 GDP의 2퍼센트를 투자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게 20조 원이다. 지금은 그 돈이 4대강, 핵발전소 건설 등 녹색을 파괴하는 데 쓰이고 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다. 삼성중공업 등 국내의 주요 조선업체들은 이미 미국 등에 풍력발전설비를 수출하고 있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직장을 폐쇄한 한진중공업을 정부가 인수해 풍력발전 공장으로 전환시키면 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지구와 인류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

핵심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 대형 선박의 스크류와 풍력

터빈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 덴마크의 베스타스는 1970년대에 조선업에서 풍력발전 설비 기업으로 전환했고 독일에서는 풍력발전 기업인 지악-샤프Siag-Schaaf가 조선업을 인수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했다.(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물론 이는 하나의 예일 뿐이다. 에너지 전환을 하면서 환경 파괴도 최소화하려면 에너지 생산을 분산시켜야 하고 — 이렇게 하면 장거리 송전으로 말미암은 전력 손실도 줄일 수 있다 —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를 가장 적절한 곳에 건설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처럼 민간 기업들에 맡겨 뒀서는 안 된다. 중앙정부 수준의 체계적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며 핵발전과 핵무기 경쟁에 매달리는 이 체제와 지배자들에게 도전하는 노동계급 운동 건설의 과제를 제기한다.

## 한국 반핵운동의 과제

일부 생태주의자들은 재생가능에너지도 지금 수준의 전력을 공급하려면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대대적인 에너지 전환을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조치들을 모두 실행에 옮길 수 있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 민간

기업들이 이윤을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건설하고 이 과정에서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곤 했던 일들을 피할 수 있다.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평범한 사람들이 각자 삶을 희생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우리는 모든 인류가 안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오히려, 더 큰 문제는 앞서 내놓은 대책들을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는 물론이고 민주당도 이런 급진적인 정책들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짓고 있는 핵발전소들은 민주당 집권 때 승인된 것들이다.

설사 추진하려 한다고 해도 즉각 핵산업계와 거대 석유 기업들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핵산업계뿐만 아니라 석유 기업들도 달가워하지 않는 일이다. 이윤의 핵심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포춘>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기업 안에 석유 기업이 5개나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세계 자본주의 전체에 얼마나 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핵무기 보유에 혈안이 된 우익들도 이런 전환에 저항할 것이다. 핵무기 보유는 이 나라의 거대 자본들이 세계 시장에서 벌이는 치열한 경쟁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주들과 정치인들은 핵발전 정책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선거 정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운동이 필요하다. 단지 선거를 통해서 이 체제 안에서만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핵 없는 세상’은 한낱 꿈에 머물 수밖에 없다.

8년 전 부안 주민들이 보여 준 저항과 투쟁의 정신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야 한다. 급진적 사회 변화의 전망을 다시 되살려서 이 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힘을 지닌 노동계급 운동과 연결시켜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핵없는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열쇠다.